

#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신속 추진 지시

### 文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이행추진위로 개편 등 제시... "새 각오로 만전"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2018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신속한 추진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범정부 노력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 진행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제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다. 그야말로 시작을 시작했을 뿐"이라며 "새로운 각오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후속조치 첫번째 지시 사항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자는 취지다. 청와대는 조만간 이행추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두번째 후속조치 관련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서 속도감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란다. 담당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여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다"면서 "잘 구분해 담당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추진하고,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건 사전 조사연구부터 시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필요한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며 "남북이 간의 3차 대화체널을 긴밀히 가동



가나 해역 피랍 국민 신병 확보

지난 29일 나이지리아 해군 고속단정에 탑승한 우리 국민 3명의 신병을 청해부대원이 인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하고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남북합의서 체결 비

준 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시기 바란다.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를 명심해주시기 바란다"며 "다만 국회의 동의 여부가 또다시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

### 최영규 "도내 학생 무상우유급식 추진하겠다"

전북도의원 익산4선거구(동산동·영동1동·어양동·팔봉동) 최영규 예비후보는 지난달 30일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생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무상우유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우선공약을 밝혔다.



이날 최영규 후보는 "그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학생 선정해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해왔다"면서 "하지만, 성장기 학생들 건강 증진에 필요한 영양소를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도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해 신체발달과 건강 유지·증진을 꾀하고, 도내 우수소비 기반 확대를 통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도내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급식하기 위해 축받기금 60%와 지방비 40%로 학생 1인당 200ml(430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상 우유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은 자부담으로 실시하고 있다.

도내에는 16만15천954명의 학생 중 무상으로 우유를 마시는 학생들은 4만7천935명에 불과하다.

최영규 후보는 "학생들이 해마다 잘 크는 성장기 아이들인데 우유급식은 정말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하며,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 드루킹 특검 평행선... 입시국회 일정 합의 '무산'

여야가 지난 30일 5월 입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나섰지만 발발했다.

여야가 5월 입시국회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민주당 댓글 조작 특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커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한국당은 국회 비준에도 부정적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정실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와 만나 현안 조율을 시도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 합의는) 전혀 안됐다"며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당연히 (민주당원 댓글 조작) 특검이 수용될 것이라는 국민적 바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 비준만 제시하고 특검에 대한 일련반구도 없었다는 것이 마음 아프다"고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합의를 위반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그는 "지난주 월요일(23일) 한국당을 제외하고 3개 교섭단체가 (김동철 원내대표가 제안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에 합의했다"며 "지자민주당 금요일(20일) 김성태 원내대표도 검찰 조사를 제안해서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야당 제안은 수용하니 다시 특검으로 갔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특수본 제안은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기 전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가 검찰 특수본을 얘기한 것은 지자민주당 금요일(20일)이다. 그때는 한국당만 특검을 주장하고 다른 야당은 하지 않을 때"라며 "우 원내대표는 검경이 수사권을 가지고 대립하는데 검찰이 하는걸 어떻게 검찰이 하느냐고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 월요일 야당이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니 오후에 민주당이 검찰 특수본에 맡기면 어떻겠냐고 했다"며 "그래서 이미 특검법을 야당이 발의했다고 했다. 우리당의 반대가 분명했다"고 부연했다. /뉴스

### 선거체험관 운영... 청춘콘서트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유권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선거 체험활동으로 조성된 남부시장 청년들의 '부지런한 배짱이 선거길'에서 지난 주말에 선거체험관을 운영하고 청년 유권자와 소통 공감하는 청춘콘서트를 했다.

선거체험관에서는 청년 유권자를 대상으로 ▲ '지방선거 알아가기' 투표체험 이벤트 ▲ 독특한 디자인의 '선거타부' 체험 ▲ '나에게 선거란 O.O이다' 빈칸 채우기 ▲ 선거 그라폴리오 전시 ▲ 선거사진관 '6·13지방선거 꼭 투표할래요' 인증샷 찍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또한, 청년들의 투표참여 독려를 위한 청춘 콘서트(부제 : '6.13. 지방선거, 청년들이 지킨다')를 열었다.

이 청춘콘서트에서는 유권자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선거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었으며, 버스킹 탭댄스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되어 축제처럼 즐겁게 즐겼다. /김진성 기자

# 軍, 내달 1일부터 대북 확성기방송 시설 철거

###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차원... "(북한이) 이행할 걸로 기대 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 따라 1일 대북확성기 방송 시설이 철거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3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5월1일부터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군사분계선(MDL) 일대 대북 확성기방송 시설철거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대북확성기 시설 철거는 지난 2004년 철거 이후 14년 만이며,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재설치한 이후 8년만이다.

최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을 준수하고자 하는 행동의 일환"이며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군이 대북확성기를 우선 철거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는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초보적 단계로서의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서 먼저 시작을 했다"며 "이 부분은 판문점 선언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라 시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우선적인 조치가 성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번 확성기를 먼저 방송을 중단했을 때 북한이 호응했던 것처럼 이 부분도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행할 걸로 기대하고 있다"며, 남북이 시설 철거와 관련해 북한과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최대변인은 북한의 대남확성기 방송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23일에 저희가

방송을 중단했고, 그에 따라서 북한도 방송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3일 0시를 기점으로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를 중단한 바 있다.

한편 최 대변인은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2010년 이후에는 안 해왔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조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것이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입장은 아마 변함이 없을 것 같다"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스




##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